sipri

SIPRI YEARBOOK 2018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는 분쟁 및 군비armaments,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독립적인 국제연구소이다. 1966년에 설립되어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 및 분석, 권고사항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과 관심 있는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18년 SIPRI 연감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분쟁, 다자간 평화활동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및 군비통제, 평화, 국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최신의 분석을 담았다. 이 책자는 2018 SIPRI 연감을 요약한 내용이며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제공한다.

목차

1. 도입 1

무력분쟁과 분쟁관리

2. 무력분쟁 및 평화프로세스 2
3. 평화활동과 분쟁관리 4

군사비 지출 및 군비

4. 군사비 지출 6
5.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8
6. 세계 핵전력 10

비확산, 군비통제, 군축

7.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 12
8.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14
9. 재래식 군비통제 15
10.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16

부록 18

www.sipriyearbook.org

© SIPRI 2018
© PEACEMOMO

1. 도입
국제안정, 인간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최근 십 년 사이 국제안보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 무력분쟁 발생 건수, 무력분쟁으로 인한 사망률, 복잡성도 높아졌으며,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전반에 걸쳐 충격적인 폭력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 세계 강제이주민 규모는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전으로 시작된 분쟁이 국제분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폭력범죄에 다수의 무장단체 활동이 다각도로 연계되고 있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 등은 인간안보 상황의 복잡성을 한층 더하고 있다.

주요 무기의 국제이전은 증가했고,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정점에 오른 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핵탄두 배치는 지속해서 줄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한 조치들은 약화될 위험에 처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중단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현재 이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2021년 2월부로 만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기간 연장이나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의 핵비확산 전망은 양면적이다. 국제적인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한 반면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성공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7년 7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채택되자 핵보유국(핵무기보유국) 및 동맹국들은 상당한 반대를 표시했지만, 협정 지지자들은 완전한 핵군축으로 향하는 거의 결정적인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았다.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핵무기와 국제안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래된 철학의 차이는 여전히 깊다.

2017년에는 국제적 긴장과 역학관계의 지각변동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교전 참여에 더해 서방 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던 미국-러시아 관계는 당분간 러시아의 서방세계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 외에 2017년도 벌어진 중요한 국제적 긴장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 긴장 관계, 카슈미르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지역 내 경쟁 구도, 터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의 긴장 등이 있다.

국제적 긴장에는 오랜 앙숙 간의 긴장 관계나 특정 지역에서의 긴장을 넘어서는 더 큰 지정학적, 지리전략적 관계와 역학관계의 지각변동이 영향을 미친다. 냉전 시대의 양극체제 모델이나 냉전 종식 후의 단극체제 모델 모두 현재의 사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

2. 무력분쟁 및 평화프로세스

현재의 무력분쟁은 과거 양상과는 달리 도심지에 집중되면서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를 더 초래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1월–11월간 폭발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5,399명으로 이중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2016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강제이주자 규모는 2016년 말 6,560만 명에 달했으며, 미얀마에서 새롭게 발생한 강제이주 문제에 더해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장기화된 강제이주 위기로 인해 2017년에도 기록적 수치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무력분쟁은 식량 불안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이상 7개국의 경우 최소 주민 1/4이 위기 또는 긴급상황 수준의 식량 불안에 처한 것으로 기록됐다.

미주

미주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내 진행 중인 평화프로세스로 서반구의 유일한 무력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보였다. 그렇지만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폭력이나 폭력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미주 지역 내 일부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이며, 특히 중미 북부 지역에서 강제이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017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이상 5개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미얀마의 경우 로힝야인들의 강제이주가 방글라데시로까지 여파를 미쳤으며,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 치안 기관들이 처벌받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폭력을 저질렀다.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에서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여타 지역이 여러 이유로 불안정을 겪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 고조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한 것이다. 네팔과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로 인해 두 나라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면도 있다.

유럽

2017년 유럽 지역 내 진행 중이었던 무력분쟁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양국 간의 분쟁인 나고르노-카라바크 분쟁과 우크라이나 분쟁이었다. 비교전 상태이지만 종결되지 않은 몇몇 분쟁은 해결이 요원해 보였다. 키프로스, 조지아(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코소보가 이 경우에 속한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의 긴장,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 상태는 고조된 채로 유지됐으며,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방지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17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 이상 7개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상호 연관된 분쟁으로

해당 지역 맹주 및 국제 열강이 관여하고 있고 국가하위행위자sub-state actors 다수가 관여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 정세로 꼽을 수 있는 것에는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되는 부정적 결과 및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쟁 구도, 이슬람국가의 영토 손실 등이 포함된다.

이집트는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인권상황을 맞고 있으며, 시나이반도에서는 공공연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는 크게 파괴된 모술과 같이 한때 이슬람국가(IS)가 장악했던 지역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와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간에 그리고 각 파 내부에서 진정한 정치적 화해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 맹주와 국제 열강이 관련된 시리아 내 복잡한 전쟁으로 시리아의 인구 절반이 강제이주를 겪게 되었다. 이중 540만 명이 난민으로,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으로 살고 있으며, 65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고, 추가로 400만 명이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에 있다.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도, 동시 진행된 아스타나 협상Astana negotiations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후티Houthi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 봉쇄를 유지했는데 이는 끔찍한 인도적 위기를 가져왔다. 최소 1,700만 명(인구의 60%)가 심각한 식량 불안 상황에 처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말리,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 7개국에서 무력분쟁이 진행됐다. 부룬디, 카메룬, 감비아, 케냐, 레소토, 수단, 짐바브웨 등 국가들도 전후 갈등과 긴장을 겪거나 잠재적 무력분쟁의 위험에 처해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정세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여러 분쟁이 폭력적 이슬람 단체, 기타 무장단체, 범죄조직 등의 초국적 행위의 결과로 여러 국가나 지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헬과 차드호 지역 국가들 다수에서 이같이 여러 국가에 걸친 분쟁은 극심한 빈곤, 불안정, 경제적 취약성 및 낮은 회복력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 부패, 경제 정책과 관리의 부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미국 두 외부 국가가 주도하는 대테러활동이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3. 평화활동과 분쟁관리

2016년과 달리 2017년의 평화활동은 현장에서나 활동본부에서나 모두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국제연합(UN)의 경우에는 특히 더 분주했다. 2012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축소로 시작된 평화활동 인원 감소추세가 2017년까지 이어졌다.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2017년 기준 145,911명으로 4.5% 감소하였다. 2016년 이전까지는 유엔에서 배치한 현장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7년 기준 7.6%가 감소하였으며 비유엔 현장 배치 인력은 47,577명으로 2.3% 증가하였다.

2017년 평화활동의 추세

2017년 한 해 동안 63개국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한 곳이 늘어난 것이다. 유엔 평화활동 3개 — 코트디부아르유엔평화유지군(UNOCI), 유엔콜롬비아파견단(UNMC),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 — 이 종료되었는데 콜롬비아와 아이티의 경우 유엔콜롬비아진상조사단(UNVMC)과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의 작은 사절단smaller mission으로 대체되었다. 비유엔 경찰 및 군 활동의 경우, 솔로몬제도지역지원단(RAMSI)의 한 곳이 종료되었고 그 동안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OWAS) 감비아파견단(ECOMIG), 유럽연합 이라크 안보 분야 개혁지원자문기구(EUAM Iraq),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레소토 예방본부(SAPMIL) 등 세 개의 새로운 비유엔 경찰 및 군 활동이 수립되었다. 유엔이 평화활동의 중심 행위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경제 공동체에 배치된 두 개의 비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아프리카 지역의 행위자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헬 5개국 합동군에게도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국적 개입 활동은 SIPRI의 다국적 평화활동의 정의에서 벗어난 회색지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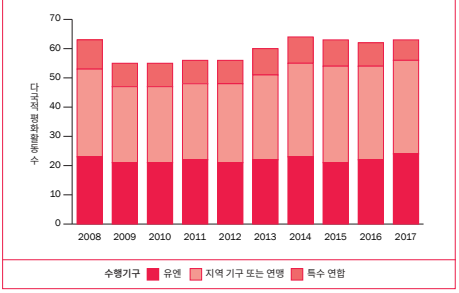
현지국과의 긴장

유엔 평화활동은 지속적 평화라는 의제에 입각하여 정치적 과정으로서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의 평화활동은 국가주권 원칙과의 긴장이 증대되고 현지국 동의라는 경계선을 줄타기하며 전개된다. 이런 상황은 부룬디와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에서 분명해졌는데 현지국 정부가 유엔의 노력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평화유지군 배치를 방해했다. 유엔 체제 바깥에서는 더한 상황도 가능하다. 보코하람에 대항하는 사헬 5개국과 다국적연합군(MNJTF)처럼 현지국은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적 해법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감비아와 레소토의 경우 현지국 정부의 지원 여부는 논쟁거리이지만, 지역regional 기구들이 두 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들에는 개입할 수 있었다.

평화유지군 사망률

지난 몇 해간, 적대적 행위로 인한 평화유지군 사망률은 유엔말리안정화임무단(MINUSMA)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하지만 2017년 유엔중앙아프리카공화국평화유지군(MINUSCO)과 유엔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MONUSCO) 역시 큰 인적 손실을 겪었다. 가장 큰 희생이 발생했던 것은

수행 기구 형태에 따른 다자간 평화활동 수, 2008–17



12월 7일 북키부North Kivu 지역에 위치한 세물리키Semuliki 기지가 받은 공격으로 탄자니아 평화유지군 15명이 사망했고 최소 53명이 부상당했던 사건이다.

전반적으로 적대행위로 인한 유엔 평화활동 인력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절대 수치(2016년 34명에서 2017년 61명)와 비율(1000명당 0.31명에서 0.61명으로 증가)면에서 모두 큰 증가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도스 산토스 크루즈Carlos Alberto dos Santos Cruz 중장의 책임하에 진행된 평화유지군의 안전에 관한 독립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제기하였다. “파견 현장의 도전적인 상황들에 직면하여 더욱 확고하고 선제적 준비태세를 갖춘 민첩하고 기동력이 있는 군사력을 유엔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개혁과 예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평화활동에 대한 유엔 고위급 독립 패널 보고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평화유지활동 개혁에 관해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두 가지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첫째는 평화활동 인력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증대이고 둘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평화유지 예산 대폭 삭감이다.

2017년 아프리카 평화활동에서 본 것처럼 이제 유엔 평화활동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해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을 계기로 유엔은 많은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평화활동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는 이 예산삭감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혁에 실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콩고민주공화국안정화임무단 사례와 같은 꼬리 자르기 전술과 유엔/아프리카연합 다르푸르 합동작전(UNAMID) 등에서 나타난 상당한 활동축소의 결과, 평화유지군이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되고 현지인들의 취약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이 더 적은 작전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4. 군사비 지출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7년에 미화 1조 7,390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하며 이는 곧 한 사람당 미화 230달러를 지출한 셈이다. 세계 총 군사비 지출은 2016년 대비 실질 비용 기준으로 1.1% 정도 약간 상승했다.

북미의 군사비 지출은 7년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2016년에 비해서는 0.2% 감소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3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6년 대비 4.1% 증가했다. 서유럽의 경우 군사비 지출이 3년간 지속해서 상승했고, 2016년 대비 1.7%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증감 경향이 다양한데 중부 유럽과 중동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경우), 남미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아프리카, 중미와 카리브해, 동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감소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화 6,100억 달러로 꾸준히 세계 최대 지출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의 3.1%로서 201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해 22% 감소했지만, 감소추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2017년 후반, 미국 의회는 2018년도 국방비로 미화 7,000억 달러를 승인했는데,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은 2017년 미화 2,280억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했다. 2016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소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그 증가 폭은 국내총생산 증가와 물가상승률에 상응한다.

세계 군사비 지출, 2017

지역	지출 (US$ 단위:억 달러)	증감률 (%)
아프리카	(42.6)	−0.5
북아프리카	(21.1)	−1.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6	0.9
미주	695	0.0
중미 및 카리브해	7.6	−6.6
북미	630	−0.2
남미	57.0	4.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477	3.6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82.7	3.0
동아시아	323	4.1
오세아니아	29.9	−0.6
동남아시아	41.1	0.1
유럽	342	−2.2
중앙유럽	24.1	12
동유럽	72.9	−18
서유럽	245	1.7
중동	. .	. .
전세계	1 73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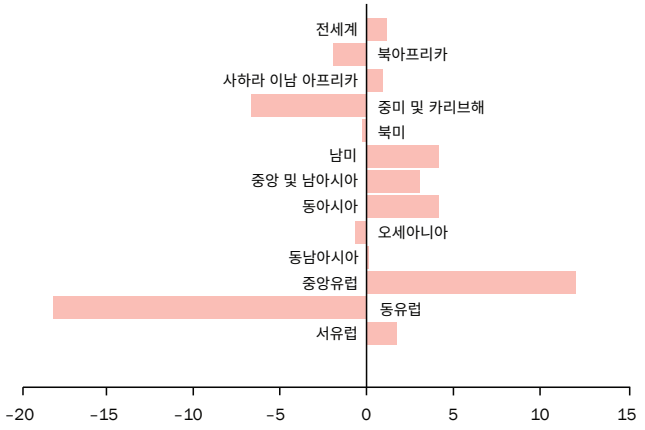
( ) = 불확실한 수치; . . = 데이터 확인 불가. 현 지출 수치(2016) 미화 달러로 표시. 모든 증감률은 2016-2017 실질 증감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비 지출은 미화 6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액함으로써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3위를 차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위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미화 663억 달러로 20% 가까운 감액을 보였으며, 인도는 2017년 미화 639억 달러로 5.5%의 증가를 보이며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부채, 유가, 군사비 지출

국가 경제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정부의 석유 세입의 규모가 재정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4년의 유가 하락(그 이후 지속된 저유가)으로 이러한 국가들의 세입이 심각하게 줄어들었고, 군사비

2016-17 지역별 군사비 지출 비율 변화



지출을 포함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했다.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15개 국가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과 유가 동향 및 군사비 지출 동향을 비교 평가해 보면, 석유 세입이 감소하면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찾아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15개 국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사비 지출이 평균 16% 정도 감소하였지만 석유 가격은 약 45% 하락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54% 증가하였다. 이런 국가들에서 세입과 지출의 격차는 대부분 부채로 충당된 것이다.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

SIPRI는 2017년 페루와 베네수엘라의 예산외 기금 조성을 조사하여 군사비 지출 투명성 증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예산 외 지출은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불투명한 지출인데 주로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충당된다. 예산 외 기금은 의회나 재정부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기 구매나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예산 외 기금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과 기업에 거액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한다. 베네수엘라와 페루의 경우 예산외 기금으로 조달된 재원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도 어떤 책무나 감시도 없이 지출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군사비 지출 투명성은 계속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특히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군사비 지출 보고를 보면 이 우려가 실감된다. 2017년 7월 31일까지 2016년 군비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불과 42개국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어느 나라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계 군사비 지출 5위안에 드는 4개 국가, 미국, 중국,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저조한 참여와 정보 포괄성의 결여로 인해 군사비 지출 유엔 보고 체계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해 보인다. ●

5.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주요 무기의 국제이전 규모는 2008–12년 대비 2013–17년에 10% 증가해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013–17년간 최대 무기수출 5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으로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량의 74%를 차지했다. 1950년 이래 미국과 러시아(1992년 이전에는 구소련)는 계속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항상 상위 10위권을 점유해왔다.

상위 5대 무기 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중국이며 이들 5개국의 무기 수입량이 전 세계 총 무기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2013–17년 주요 무기 수입 총량의 42%를 차지했으며 중동 지역은 32%를 차지했다. 2008–12년 대비 2013–17년 기간에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공급은 103%,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무기 공급은 1.8% 증가했다. 반면, 유럽으로의 공급은 22% 감소했으며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 역시 각각 29% 와 22% 등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 보고 횟수, 1992–2016

주요 무기 수출국 및 수입국, 2013 – 17

수출국	세계 점유율 (%)	수입국	세계 점유율 (%)
1 미국	34	1 인도	12
2 러시아	22	2 사우디아라비아	10
3 프랑스	6.7	3 이집트	4.5
4 독일	5.8	4 아랍에미리트	4.4
5 중국	5.7	5 중국	4.0
6 영국	4.8	6 호주	3.8
7 스페인	2.9	7 알제리	3.7
8 이스라엘	2.9	8 이라크	3.4
9 이탈리아	2.5	9 파키스탄	2.8
10 네덜란드	2.1	10 인도네시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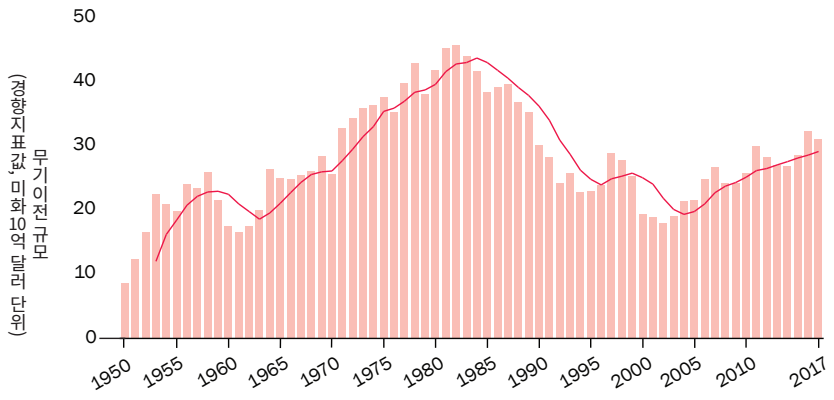
무기 이전의 투명성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2017년에도 한 해 무기 이전에 관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OCA)에 따라 무기 수출과 수입 사실을 보고한 국가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보고 메커니즘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의 무기거래조약(ATT) 비준국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무기 수출과 수입 신고 의무를 대체로 완수했다.

국가 무기수출의 재무 가치(2016년)*

무기 이전에 관한 SIPRI 데이터는 그 재무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지만,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무기 수출의 재무적 가치를 수치로 발표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SIPRI는 2016년 세계 무기 거래의 총 가치가 최소 미화 884억 달러라고 추정한다.

주요무기 이전 추세, 1950 – 2017



무기생산과 군수기업

SIPRI가 선정한 세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수기업은 군수산업 분야 내수 및 수출을 통한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이다(중국 제외). 2016년* SIPRI 100대 무기생산업체 및 군수기업의 총 매출은 미화 약 3,75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1.9% 증가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100대 업체를 주로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무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생산기업의 무기 판매량은 변동이 없었다. 러시아 기업들의 무기 판매 총합은 2016년에도 계속 증가했지만, 신흥 및 기존 군수산업 국가들의 무기 판매 동향은 혼합된 경향을 나타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제적 긴장과 무력분쟁이,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군수산업화 전략 이행이 100대 업체들의 무기 판매 증가를 이끈 주요 동력이다. 그 밖에도 업체 간 인수 합병, 매각 등이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

* 가용 데이터 기준 최신 년도

6. 세계 핵전력

2018년 초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9개국이 약 14,4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750개가 작전 병력에 배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거의 2,000개는 고도의 작전경계태세로 유지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상황

전반적으로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세계 핵무기의 약 92%를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라 전략 핵전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는 축소하면서도 핵탄두, 미사일 및 항공전달체계, 핵무기 생산 시설의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핵무장 국가의 경우 핵무기 보유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핵무기고 보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6차 핵실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우선시하며,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실험으로 인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총 핵폭발은 2,058건을 기록했다.

불충분한 투명성

핵무장 국가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핵비축 상황과 핵전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 명시된 핵전력의 세부 사항을 미국과는 공유했으나 대외적인 공개는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중단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일부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핵무기고의 규모나 상태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핵무기고에 대한 정보 비공개 정책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핵전력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

2017년 세계 핵전력

국가	배치된 탄두	기타 탄두	총비축량
미국	1 750	4 700	6 450
러시아	1 600	5 250	6 850
영국	120	95	215
프랑스	280	20	300
중국	–	280	280
인도	–	130–140	130–140
파키스탄	–	140–150	140–150
이스라엘	–	80	80
북한	–	(10–20)	(10–20)
총계	3 750	10 715	14 465

–는 0, ( )는 불확실한 수치로 총계에서 제외. '기타 탄두'란 저장고에 보관된 작전 탄두와 해체 예정 탄두를 포함한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총계는 범위 내 가장 높은 추정치를 포함한다. 모든 수치는 2018년 1월 기준 근사치다.

2017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 현황

핵무기 원료는 핵분열 물질로서 고농축 우라늄(HEU)이나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파키스탄은 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만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 핵분열 물질에 관한 전문가 패널(IPFM)은 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세계 보유 현황, 2017
고농축우라늄	~1 340 톤
추출 플루토늄	
군용 보유량	~230 톤
민간 보유량	~290 톤

7.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 방지

2017년에 핵 군비축소와 핵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노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핵무기금지조약

2017년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협상 완료와 국가들이 서명을 시작한 해로 기록된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며,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말에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사용이 초래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해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이 시작되었다. 또 이러한 진전은,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핵군축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대한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지지자들은 이 조약이 현존 핵무기 보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약의 장기적인 규범적 영향을 강조했다. 즉 조약이 핵무기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반인도적 무기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핵무장해제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2017년 협상에서는 핵군축 노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 및 관련 협약 간의 관계를 향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러시아와 미국은 전략적 핵전력 수치의 제한을 두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2010년부터 꾸준히 이행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러시아 – 미국 간 핵 군비통제의 진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 어느 쪽도 2021년 조약 만료 이전에 조약의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없다. 또 이 조약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어느 쪽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가 1987년 미소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철폐조약(INF)에 의해 금지된 새로운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냉전 시대의 주요한 군비통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전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배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각국의 목표와 군비통제 우선순위 상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은 2017년에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꾸준히 이행했다. 2015년 7월, 이란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을 지칭하는 'E3/EU+3' 국가들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협약을 약화할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되었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행보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 결정으로,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 의회는 제재 재개 여부에 대한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져야 했다. 비록 의회가 이후 제재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보증거부 결정은 미국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다른 모든 서명국 간의 불화를 야기했다.

다자간 군비통제

2017년에는 핵 군비축소와 핵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에 관한 여러 다자간 협약 및 발의가 진척되기도 하였다. 2월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세계 유일의 다자간 협의기구인 제네바군축회의(CD)는, 군축회의의 논의계획 수립조차 불가능하게 했던 2009년부터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그간 다루었던 모든 의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진전상황을 기록하고 향후 논의 계획의 공통 기반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5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또한 다자간 군비축소 및 비확산 의제에서의 두 가지 미해결 사안, 즉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과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다. 7월과 8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전문가들 중심의 준비그룹이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을 위한 협상 개시 방안을 논의했다. 9월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효력발생 촉진회의 제10차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대(對)북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여전히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로 남아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거나 확대하는 결의안 3개를 채택했다. ●

8.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및 각국 정부는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4월 4일 시리아 칸 세이쿤Khan Shaykhoun에서 사용된 사린을 포함하여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모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칸세이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와 유엔의 대시리아 합동조사기구(JIM)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임무 연장 결정을 받지 못해서 11월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합동조사기구는 활동기간 중 보고서 7건을 발표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4건의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이 있으며 비정부활동세력에게 2건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평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선언평가팀과 동 협약 진상조사단(FFM)의 업무(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협약 기술사무국에 전달한 선언문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조사하는 업무)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했다.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양쪽에서 주둔지를 잃자 각국 정부는 이슬람국가의 화학무기와 관련된 의도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켰다. 2016년 말 유엔 총회에 의해 수립된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국제법상 심각한 중대범죄 가해자의 조사 및 기소를 돕기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국제적인 범죄 조사와 기소 활동을 통해, 우리는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된 사건들에 대해 각각 그 책임에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되었다.

화학무기 군비통제

한때 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규정대로 2017년에 비축된 화학 무기의 폐기를 완료했다. 2017년 11월에는 제22차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총회(CSP)가 열렸다. 총회는 2018년에 열리는 제4차 화학무기금지협약 검토회의 준비 상황을 검토하고 페르난도 아리아스Fernando Arias 스페인 대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생물무기 군비통제

12월,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BTWC)에 대한 연례 당사국 총회는 2018–20년 내 연례회의 논의 절차에 대해 합의하였다. 당사국들은 선택된 주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효과적인 이행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당사국들은 논의가 당사국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협약 준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전환되기를 바랐다. 2017년 당사국 총회의 결과, 제네바 소재 협약실행지원단의 지원을 받는 협약의 전문가 회의와 당사국 회의를 통해 협약의 여러 규정에 관한 정보와 견해 및 모범 사례가 매년 교환되는 정도의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 ●

9. 재래식 군비통제

인도주의적 군비통제

다양한 범주의 무기들에 관한 규제는 국제인도주의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래식 군비통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군비통제 협정 가입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여전히 협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법 간의 해결되어야 할 간극이 존재한다. 2017년,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APM Convention), 확산탄금지협약(CCM) 등 세 가지 협약의 틀에 따라 이러한 몇몇 당면 문제에 대응하는 협상이 진행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이 2017년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면서 당사국 수는 총 125개국이 되었다. 또한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은 신기술 및 신흥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대를 제공해 왔으며 2017년에는 그 논의가 자율살상 무기체계(LAWS)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사상 최초로 자율살상무기체계 분야의 기술적, 군사적, 윤리적/법적인 차원을 검토하는 논의가 정부전문가그룹(GGE)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전문가그룹은 이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2018년 열흘 동안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성에 중점을 둔 논의를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구밀집지역에서 비국가무장단체에 의한 급조폭발물(IEDs) 등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 및 폭발무기 사용에 대해 국제적인 우려가 커졌지만,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논의 틀에서 이에 관한 새롭고 구체적인 대응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합의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족으로 여러 전문가 회의가 취소되기까지 하면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협약 당사국들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2018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대인지뢰 및 집속탄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 20주년이었던 2017년에, 스리랑카와 팔레스타인이 각각 163번째, 164번째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2016년 대인지뢰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 수가 199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우크라이나, 예멘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의 결과이다. 2017년, 알제리와 모잠비크는 모든 지뢰를 제거했다고 공표했으나 현재 57개국과 기타 4개 지역은 여전히 지뢰매설지역으로 남아있다. 2017년 비대인지뢰(MOTAPM)에 대한 논의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틀에서 진행되었다. 베냉과 마다가스카르가 확산탄금지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수는 102개국이 되었다. 올해 시리아와 예멘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탄 사용이 있었다. ●

10.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17년 재래식 및 생화학, 핵무기와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및 재래식무기 거래의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다자간으로, 또 지역적으로 지속되었다. 무기의 이중 용도와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추진하는 여러 국제적, 다자적 제도에 대한 국가들의 가입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전 몇 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2013년에 제정된 무기거래조약(ATT)의 효과적인 이행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장할 것인가, 다수의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사례, 이중용도와 무기거래통제가 기술발전 및 진화하는 무기거래 유형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 등에서 당사국들과 비정부단체(NGOs)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다.

무기거래조약

2017년 9월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제3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었으나, 당사국들과 무기거래조약 제정을 지지했던 비정부단체 진영 간에 긴장이 다시 표출되었다. 비록 협약 당사국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조약에 따른 보고 및 재정지원 의무가 준수 미달 상태였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당사국 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집중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은 무기거래조약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안보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당사국 수 증가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발효중인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7년

유엔(13개 무기금수조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NGF) • 콩고민주공화국(NGF) • 에리트레아 • 이란 • 이라크(NGF) • 이슬람국가(Da'esh),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분대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NGF) • 소말리아(NGF) • 수단(Darfur) • 탈레반 • 예멘(NGF)

유럽연합(21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행(9개):

• 중앙아프리카공화국(NGF) • 콩고민주공화국(NGF) • 에리트레아 • 이라크(NGF) • 알-카에다, 탈레반 관련 개인과 분대 • 레바논(NGF) • 리비아(NGF) • 소말리아(NGF) • 예멘(NGF)

유엔 무기금수조치 변용 적용(3개):

• 이란 • 북한 • 수단(Darfur)

유엔과 무관한 독자 무기금수조치(9개) :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남수단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아랍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NGF = 비정부군대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7년 한 해 35개의 다자간 무기금수조치가 시행되었다. 유엔에서 부과한 것이 13개, 유럽연합(EU)에서 이행한 것이 21개, 아랍연맹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1개이다. EU의 무기금수조치 21개 중에서 9개는 유엔 무기금수조치를 직접 적용한 것이고, 3개는 유엔 무기금수조치와 비슷하나 포함된 무기의 종류 또는 지역적인 범위가 다른 것이며, 마지막 9개의 경우 유엔 조치와 무관하다. 대부분 무기금수조치는 재래식 무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EU의 대이란 및 대북한 무기금수조치, EU의 대러시아 무기금수조치를 살펴보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7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EU의 무기금수조치가 새롭게 부과되었다. 지난 몇 년 간 유엔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기금수조치 이행에 있어 보고된 다수의 위반사항을 포함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위반사항의 심각성과 범위는 사안별로 상당히 다양한데, 무기금수조치에 반하는 많은 양의 무기 운송이 발생한 경우, 공급국 또는 수입국이 무기 이전을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수출통제체제

2017년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바세나르 체제(WA) 등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각각의 거래통제 목록을 갱신했다. 지난 몇 년간 모든 수출통제체제가 직면한 핵심 도전 과제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무기 품목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통제항목 목록에 지속적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수출통제체제는 신규 회원국 영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규 회원국 승인에 있어 기존 회원국 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인도는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 승인을 받았고 2018년 초에 호주그룹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6년 인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에 뒤이은 것이다. 인도의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 신청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2017년 EU의 수출통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EU에서 제안, 논의 중이던 이중용도규제 재편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주요 무기수출통제 체제, 무기거래 및 이중용도품목 통제, 그리고 유엔과 EU의 무기금수조치는 모두 기술의 무형이전(ITT)을 통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기술의 무형이전은 일반적으로 기술 데이터 이전과 관련 지식 및 기술지원의 이전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의 무형이전은 탐지가 특히 어려워 개별 국가가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출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의 무형이전의 범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17년, EU가 이중용도규제 및 수출통제체제 재검토 논의를 하는 가운데,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어떤 통제 체제로 편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분야의 도전 과제로, 수출통제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해야 하는지, 한다면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무형이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확산 위험을 배가시키는 적층제조(3D 프린팅)로 인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

부록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18년 1월 1일 기준)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 의정서)

1948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노사이드 조약)

1949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 (제4협약);
1977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네바제협약추가의정서-제1, 2 의정서)

1959 남극조약

1963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외기권 조약 / 우주 조약)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르코조약)

1968 핵무기비확산조약 (핵확산금지조약, NPT)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해저비핵화조약)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독성무기협약, BTWC)

1974 지하 핵실험 제한 협정 (TTBT)

1976 평화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평화 목적의 핵폭발 조약, PNET)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협약)

198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CCW 협약, 또는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라로통가 조약)

1987 중사정 및 단사정미사일의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 조약)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조약)

1992 항공자유화조약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1996 소구역 군축협약 (플로렌스 협정)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협약)

1999 재래식 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뿔 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협약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 아프리카 협약 (킨샤사 협약)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2013 무기거래조약 (ATT)

미효력 협정 (2018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2017 핵무기금지조약

안보 협력 기구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2019년 3월 29일까지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것을 유럽 이사회에 통보했다. 또한 2017년에는 모로코의 아프리카연합 가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원자력기구(IAEA) 가입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

2017년 주요 사건 연대기

1월 1일.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가 9번째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
2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관련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 행사
3월 31일. 유엔 안보리에서 차드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해당지역의 테러리즘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 2349를 만장일치로 채택
4월 13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IS기지를 겨냥, 전투에 배치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핵탄(GBU-43 /B 공중폭발대형폭탄) 투하
5월 6일. 시리아 서쪽 지역에서의 부분적 휴전 합의 및 긴장완화지역de-escalation zones 설정에 대한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간 합의
6월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7월 7일.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8월 28일.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73일간의 군사적 대치 이후 종료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감행
10월 6일.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노벨평화상 수상
11월 16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해온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유엔 합동조사단의 임기 만료
12월 9일. 이라크, IS와의 전쟁에서 승리 선포

피스모모

피스모모는 수평적 서로배움을 통해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활동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모모"라는 이름은 모두가 모두에게 배운다는 '서로 배움'에 대한 지향과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에 담긴 근현대의 폭력적인 시간성에 대한 성찰과 깊은 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생명과 존재들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배움을 통해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적, 기계적, 강박적 시간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머뭇거림의 시간, 깊은 사유의 시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돌아봄과 돌봄이 부재한, 전체주의적 교육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의 서로 배움"이라는 교육의 변화와 이를 통한 사회의 평화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본 연구소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사업을 통하여, 평화와 교육분야의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피스모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의 내용적 심화와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PEACE MOMO

피스모모
PEACEMOMO

홈페이지: peacemomo.org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대표번호: 02-6351-0904
팩스: 303-3441-0904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미래청 303-A

TEPi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홈페이지: momotepi.org
이메일: momotepi1211@gmail.com
대표번호: 02-6352-0904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기업 제외)

SIPRI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 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2018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18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Oxford University Press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882155-7, 양장본
ISBN 978-0-19-186088-1, 전자책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번역 김주원, 문아영, 박승호, 윤지영, 전세현, 하늬
편집 하늬 **감수** 이대훈 **디자인** 민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8 SIPRI YEARBOOK
군비, 군축, 국제안보

전 세계의 정치가, 외교관, 언론인, 학자, 학생 등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온 SIPRI 연감은 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기술, 군사비 지출, 무기거래, 무기생산, 무력분쟁, 분쟁관리,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통제와 관련한 개괄적 정세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2017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49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무력분쟁과 분쟁관리: 5개 지역(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무력분쟁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 정보, 전 세계/지역별 평화활동에서 나타난 경향
-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동향: 부채와 군사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석유가격과 군사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 군사비 지출, 무기이전, 무기수출 금액 관련 투명성에 대한 분석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 각각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 북 핵실험 등 개괄적 분석
- 핵 군비통제: 핵무기금지조약의 협상 및 서명을 위한 개방,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및 군축, 이란 핵 협상의 이행,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확산 제재 등을 주로 한 정보
-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중동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 포함
- 재래식 군비통제: 인도주의적 군비통제에 중점을 둔 자율살상무기체계 및 주거지역에서의 폭발무기 사용 규제 노력
-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기술무형이전과 적층제조 등 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 다자간 무기금수조치와 수출통제체제 관련 주요 진전상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이 외에도 부록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 협력기구 목록 및 2017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

www.sipriyearbook.org